

동아시아 비평

제 2호 / 1999

반년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I. 특 집 - '아시아적 가치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교 사상에서의 도덕과 경제 / 이광호.....5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과 사회 발전 : 유교적 가치의 재발견
유석춘·장미혜.....22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재평가 :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전제국.....43

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 서구의 동양 정치문화론 비판
/ 김영명.....60

환태평양 지역 대중적 가치의 지속과 변화 / A. 인클레스.....75

남태평양 지역 전통주의의 발흥과 그 문제점 / S. 로슨.....92

II. 서 평

동아시아의 문화와 경영 / 김종식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1980);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New York : McGraw-Hill, 1997) 104

근대 일본은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 양기웅

岡本幸治 編著, 『近代日本のアジア観』(東京 : ミネルヴァ書房, 1998) 117

한국인의 한국전쟁 연구 / 김명섭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서울 : 두레, 1998) 130

한국 사회와 미국인의 편견 / 김은미

Mark L. Clifford, *Troubled Tiger : Businessmen, Bureaucrats, and Generals in South Korea*,
rev. ed. (Armonk, NY : M.E. Sharpe, 1998). 142

III. 논 평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군국주의 비판과 군대 체험

/ 김석근.....152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과 사회 발전*

— 유교적 가치의 재발견 —

유 석 춘(연세대학교 · 사회학)

장 미 혜(연세대학교 박사 과정 · 사회학)

I. 비영리·비정부 영역

우리는 사회를 세 가지 서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강제력의 문제를 다루는 ‘국가’ 부문이다. 이 영역의 특징은 권력의 행사를 통해 타인의 의지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군대와 경찰은 이 영역의 기능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강제력의 합법적인 장치이다. 둘째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이해관계를 기초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 기업의 영리 추구는 물론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

* 이 글은 필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한국의 비정부·비영리 영역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동서 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0 : 2, 1998)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진다.

셋째는 앞의 두 가지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의 나머지 기능, 즉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권력 관계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윤 추구도 아닌 인간의 다양한 행동이 표출되는 사회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비정부·비영리 영역’ 혹은 ‘제3의 영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공간은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 조직, 학교, 가족, 시민단체, 연고 집단 등이 바로 이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 영역은 서로 다른 발전의 궤적을 밟아 왔다. 우선 ‘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발전하여 왔다. 시장은 특히 최근에는 나라의 경계를 허물며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흐름은 바로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가 국경을 뛰어 넘으며 전개되는 현상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시장 다음으로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 온 영역은 ‘국가’이다. 편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권력이 ‘민주화’라는 대세를 거역하면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군부통치가 퇴조하고 대신 선거에 의한 민간정부가 수립되어 왔다. 한국, 대만, 필리핀, 태국 등이 예가 된다. 또한 1989년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연쇄 붕괴도 크게 보면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추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의 민주화는 이제 필연의 경향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앞의 두 영역과는 달리 ‘비정부·비영리 영역’은 동질화와 이질화를 동시에 보여 주며 우리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교 교육과 같은 측면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거의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이 영역의 동질화를 추동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종교와 같은

신앙 생활의 측면에서 이 영역은 수렴은 커녕 오히려 간격을 넓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팅톤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은 바로 이러한 이질화의 맥락을 강조하는 개념일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쇠고기를 먹으면 안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문화적 규범이 갈등하는 곳은 바로 이 ‘제3의 영역’이다.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관습, 역사와 문화, 제도와 선호로 인해 이 영역은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이 혼란과 갈등은 기독교와 유교 혹은 무슬림과 같은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더욱 손쉬운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주로 국가의 영역인 제 1부문과 기업의 영역인 제 2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 3부문인 비영리·비정부 영역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조직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영역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는 모두 서구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를 서구와 동질적인 범주로 인식하는 학문적 안일함 속에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성과에 있어서도 이 분야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연구성과를 전혀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의 논의이다.

II. 한국의 비영리 비정부 영역과 유교 전통

한국 사회에는 왜 서구와 같은 형태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연고 집단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제3부문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리의 유교적 문화 전통

과 제도 및 관행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관행 혹은 제도로서의 유교의 영향력은 물론 시대나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신분 질서와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 체제를 가진 조선 시대의 상황과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현대적인 상황과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교는 과거에는 물론 오늘날까지 뿌리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유교의 영향력으로 인해 서구로부터 수입된 가치와 제도 및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변용을 겪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용의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양의 유교적 사회질서와 서구의 계몽주의적 사회 질서의 차이점을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사회 조직의 방식을 비교하기 위한 준거는 첫째, 인권; 둘째, 개인과 사회의 관계; 셋째, 국가의 역할; 넷째, 갈등의 해결 방식이다.

서구에서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의 발전과정은 자유 민주주의의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개인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계몽주의적 유산은 위계나 권위로부터 독립적인 판단력과 자율성을 가진 개인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자율적인 개인은 타인의 의지에 의해 강압을 받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사회적 역할에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생활과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구의 시민권이란 바로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서구의 역사는 부당한 권력이나 특권층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을 사회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서구의 인권 개념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는 무관하며 성이나 인종 혹은 계급적 위치 등과 같은 세속적인 구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이 태어나면서부터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서구는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권위에 기반을 갖지 않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인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가 부여한 역할과 분리되어 파악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립되고 추상적인 개인이나 자유롭고 자율적인 자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존재한다. 유교의 원리에는 특정한 역할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인간 자체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¹⁾ 따라서 유교적인 인권의 개념에서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는 분명 서구적인 인권과는 대립적이며, 역할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인권’의 개념이다.²⁾

다음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사회란 서로간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유교에서 보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적극적인 형태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가 예로서 표현된 것을 말하며, 소극적인 형태는 개인의 이기심이 극복된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이며, 개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되어

1) 유교의 가르침(君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에는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라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원리가 표현되어 있다. 이승환, “유가에 권리개념이 있는가?” 『유가 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p. 214.

2) Joseph Chan, “A Confucian Perspective on Human Rights,” in Theodore De Bary and Tu Weiming,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야 한다. 유교적인 원리에 입각한다면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호 수혜적인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이처럼 역할에 토대를 둔 개인들간의 관계는 서구적인 형태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가 물론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상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제한되고 서열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역할과 결부하여 개인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의 주체나 법률적인 권리의 담지자로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지닌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서구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인 개인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계약조차도 자신의 이해 관계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휴가나 근무 시간의 엄수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명시된 권리조차도 우리는 조직 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행사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우리의 사회적 관행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서구적 관행과 분명 상당한 편차를 보여 주고 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동서양은 차이를 보여 준다. 개인의 권리 존중을 국가의 기본 임무라고 보는 서구의 고전적인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규제하려는 ‘최소 국가주의’의 원리가 지배적이다. 이에 반하여 유교에서는 인민의 복지에 대한 군주의 관심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비유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온정적 개입주의’ 원리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인식은 동아시아 국가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개입주의적 정치 행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개인들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서양은 차이를 보여 준다. 서구에 있어서는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해를 가진 개인들간의 대립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족과 같은 화목한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사회 전체의 조화가 실현되는 상황을 이상적인 사회로 본다. 따라서 만일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적인 수단보다는 타협과 중재를 통해 법률 외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더욱이 그러한 분쟁이 가족이나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도덕적인 교육과 중재 등과 같은 타협의 수단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갈등보다는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만일 어느 한 개인이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이는 공동체 화합의 장애요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기 주장보다는 겸손과 양보가, 그리고 사익의 추구보다는 이기심의 극복이 보다 바람직한 가치로 존재한다.

한국 사회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이 서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인의 권리와 국가, 그리고 갈등의 해결방식과 같은 사회질서의 핵심적 가치가 동서양간에 지향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석에 침투하여 상품화된 인간 관계를 보편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속한 가족과 그것의 보다 확대된 형태인 혈연, 지연, 학연 단체와 같은 연고 집단에 강한 애착과 헌신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을 설명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은 바로 이러한 연고 집단의 존재로 인해 독특한 모습을 가진다. 연고 집단의 존재야말로 한국에서 유교적 질서가 오늘날에도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III.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과 연고 집단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고 집단에 대한 논의를 비영리·비정부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진행되어 온 기존의 '비정부 단체' 개념이나 '시민사회론' 혹은 '이익집단론'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과 국가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인식을 간과한 채 서구적인 자유 민주주의 및 경쟁 자본주의의 보편적 발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비영리·비정부 영역의 범위에 연고 집단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지금까지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에 대한 개념화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비영리·비정부 영역은 수입원에 따라 조직을 구분하는 경제적/재정적 정의,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목표에 따른 기능적 정의, 법률적 기준에 따르는 법적 정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정의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살라몬과 안하이머가 사용한 조직의 기본적 구조와 운영상의 특성에 입각한 정의이다.³⁾ 이 기준에 의하면 비영리·비정부 부문은 영리를 따르지 않는 분배적 특성, 정부로부터의 분리, 재정적인 자립,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4가지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준거로 연고집단을 평가해 보자. 연고 집단은 구성

3) L. Salamon and H. K. Anheier,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Working Papers of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1996).

원이 태어난 고향(지연 집단), 학창 시절의 경험(학연 집단), 같은 가문의 구성원(혈연 집단)이라는 공통의 조건과 경험을 기초로 조직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성은 매우 높지만 구성원의 자격이 출생과 함께(혈연 및 지연) 혹은 입학과 함께(학연)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연고 집단은 오히려 비결사적이고 비자원적인 1차집단 성격의 조직이다.

또한 연고집단은 배타적으로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구성원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나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다른 비영리·비정부 영역의 조직, 예를 들면 공익 재단, 사회복지 법인, 비정부 시민단체 등과 구별된다. 따라서 연고집단은 '1차적 이익집단'에 해당되는 사회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연고집단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나 시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다.⁴⁾ 비록 비공식적으로는 내부적인 연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연고 집단은 국가의 공적 권위 및 시장의 사적 영리활동 외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적 통제 및 시장의 이윤 추구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고 집단은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또한 영리의 결과를 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동시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약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비영리·비정부 영역을 정의하는 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연고 집단은

4) 하지만 연고집단 내에서 기부금 제공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 현직 국가의 고위관료나 기업의 고위경영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집단이 반드시 국가나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참여보다는 출생이나 입학과 같은 생득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앞에서 제시한 비영리·비정부 부문의 정의와 충돌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비영리·비정부 영역을 정의해 온 서구 중심의 개념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연고집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 내부적인 특성을 보이는가? 첫째, 연고집단은 재정적 후원자와 일반 회원으로 양분된 조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반 회원은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지만 대체로 조직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선거와 같은 특정한 계기가 생기면 이들은 동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고 집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과 명목상 소속만 되어 있는 회원 사이에 크나 큰 역할의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사회계층 및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구성원은 상층으로 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고 집단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내부적인 결속을 통해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하층으로 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구성원들 사이에는 유대감이 희박하고 조직의 활동에도 헌신적이지 않은 경향이 지배적이다.

둘째, 연고 집단은 전문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특수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관심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집단을 구성하는 기준이 생득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연고 집단에는 특정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쟁점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⁵⁾ 그렇기 때문에 연고집단은 주로 인간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측면, 즉 출생이나 결혼 혹은 사망과 같은 일상사의 의례를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경조

5) 그러나 역으로 연고 집단은 어떠한 쟁점이 되었건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를 조금씩은 반드시 가지고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연고 집단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조직인 것이다.

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 활동의 특징으로 인해 연고집단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일부 비정부 시민단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다른 비영리·비정부 영역, 특히 비정부 시민단체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국가의 강력한 탄압과 통제를 받아 왔던 데 비해 연고 집단은 국가의 무관심 하에 방치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특징 때문이다. 또한 연고 집단에 관여하고 있는 구성원은 상당수가 무보수로 헌신적인 조직 활동을 한다. 그 이유는 연고집단이 구성원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집단의 힘으로 처리해 주는 후원/수혜 관계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연고 집단의 역사적 발전

일반적으로 비영리·비정부 영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 및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와 연관되어 파악된다. 서구에서는 보편적인 행정 체계와 관료 제도를 확립시킨 절대주의 국가의 등장과 함께 중세 봉건시대의 지역주의와 세습적 특권이 파괴되었다.⁶⁾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구는 출신과 계급 및 직업 등과는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근대적인 법체계를 마련하여, 중세 봉건 사회의 다층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변화시키며 자본주의의 등장을 촉진하였다.⁷⁾ 서구의 근대 국가는 법률에 의한 지배를 통해 혈연과 특권, 전통과 관습, 분산된 권위의 영향력을 해체시킨 것이다. 따라서 서구적 맥락에서 연고집단은

6) John Kean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 Verso, 1988).

7) Perry Anderson,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 NLB, 1974).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점차 해체되어야만 하는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잔재일 뿐이다.

비영리·비정부 부문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서구와 동일하게 근대 국가와 시장 경제의 발달과 연관시켜서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론이나 비정부 단체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서구적인 의미의 시민사회가 등장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현상, 특히 1987년의 민주화 이후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개인과 국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결사체와 자원적 조직, 예를 들면 대중매체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문화가 출현하게된 배경에는 경제적인 발전이 진전되면서 출현하기 시작한 중산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서구적 의미의 다원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처럼 서구적인 의미의 비영리·비정부 영역의 출현에만 주목할 경우 전통 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규범에 따라서 비영리·비정부 영역의 조직화가 다양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부문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국가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저지하던 역할을 수행해 오던 기능이 재활성화된 것이라는 견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⁸⁾ 조혜인은 관직을 갖지 못하고 재야(在野)에 존재하던 조선시대의 양반계층 즉 사림(士林)세력들이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과도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서구에서의 시민사회가 담당했던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정신적인 지도자

8) Hein Cho, "The Historical Origins of Civil Society in Korea," *Korea Journal* 37 : 2 (1997), pp. 24~41.

들이었던 이들 사림세력은 향약이나 향촌을 통해서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지방의 관료들을 경유하지 않고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림으로서 국가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교적인 의미의 시민사회는 서구의 시민사회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서구의 시민사회가 근대적인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성장해 왔던데 반해 유교적인 시민사회는 반(反)국가주의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⁹⁾ 유교적 질서에서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호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유교는 아무런 선험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국가는 중립적인 장치일 뿐이다. 대신 유교는 백성들에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일보다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백성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라고 여긴다. 이러한 유교의 국가관이 사림세력으로 하여금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당위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시민사회의 전통에서 반국가주의는 필연이 아닌 것이다.

국가를 견제하는 중간세력으로서 존재해 왔던 사림세력은 특정한 지역과 학연을 배경으로 조직되었고 관직으로의 진출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고집단의 전통적인 존재 형태였다. 한국적 시민사회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사림과 같은 연고집단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¹⁰⁾ 우선 형식적인 기준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

9) David I. Steinberg,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in Korea: On Contemporary and Classical Orthodoxy and Ideology," *Korea Journal* 37 : 3 (1997).

10) 최재석, 『한국 농촌사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7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1983 [1965]).

야 하는 제도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즉 왕조에서 공화정으로 국가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상소와 같은 정치적 압력의 행사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대신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이나 매스컴과 같이 여론을 수렴하는 매체의 정치적 중요성이 높아지자 연고집단은 연결망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기능을 획득한 사회적 장치, 예를 들면 정당이나 언론기관 등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모색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어김없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주의적 투표행위는 이러한 연고집단의 역할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또한 '서울대의 나라'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학연의 영향력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국가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장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연고집단의 영향력은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의 조직방식으로 확연히 드러난다.¹¹⁾ 한국사회에서 연고집단의 영향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연고집단은 비영리·비정부 영역이라는 제3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그 기능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1부분과 2부분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V. 연고 집단과 사회 발전: 가능성과 한계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강조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11) Marco Orrú, Nicole Woolsey Biggart & Gary Hamilton, "Organizational Isomorphism in East Asia," in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 (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원리를 궁극적인 정치 발전의 모델로 삼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과연 역사적 배경이 다른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 그것은 사실 다원주의적 정치문화,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적인 가치를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왔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법률에 의한 지배의 확대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정치적인 과제로서 인식해 왔다. 그러나 87년에 이루어진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6월 항쟁과 같은 한순간의 폭발적인 사회 운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폭은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나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정권 교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지역주의나 자신의 주변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 능력보다는 출신학교나 지역을 우선하는 학벌주의 등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고집단을 통해서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후원/수혜 관계가 정치나 행정을 부패시키는 온상이 된다거나, 집단 내부에 적용되는 윤리와 집단 외부에 적용되는 윤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IMF의 개입을 초래한 주범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인식해 온 바와는 달리

연고집단의 영향력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자본주의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든 정치적인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든, 혹은 문화적인 영역에서 합리성이 신장되어 가는 과정이든, 서구의 보편주의적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작업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및 제도적 특수성과 그 속에 강하게 기능하는 연고집단의 영향력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이에 걸맞는 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자본주의의 심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연고집단의 강력한 영향력과 우리의 공동체적 전통을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해야만 하는가.¹²⁾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도덕적인 목적이나 합법성의 원리와 관련시켜 보지 않고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고 정부를 조직화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로 본다면, 보통선거권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적인 선거가 정규적으로 치루어지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민주주의를 절차적인 수준에서 좁은 의미로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정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분명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이 고도의 관료주의화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은 구체

12) Daniel, A. Bell, "The East Asian Challenge to Human Rights : Reflections on an East West Dialogue," *Human Rights Quarterly* 18 : 3 (1996), pp. 641~67.

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민주주의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있는 서구 사회조차도 실질적인 대중의 정치적 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론을 종합하고 필요한 대안을 취사선택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는 고도의 자질을 가진 정치 엘리트의 지도력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적인 형식 민주주의의 논리 속에는 엘리트주의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¹³⁾

이처럼 서구식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가 모든 성원들에게 현실적으로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회성원의 신분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에 따른 혹은 군자와 소인과 같은 개인의 자기완성도의 차이에 따른 현실적인 불평등을 전제로 하면서 지도자의 도덕적 감화력에 의해 백성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유교의 덕치 이념은 서구식 민주주의에 못지 않은 가치를 가진다.¹⁴⁾ 윗사람이 도덕적 모범을 보일 때 아랫사람이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된다는 생각이 덕치의 바탕이다. 덕치 이념은 하나의 통치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의 모든 인간 관계, 예를 들면 가족 관계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공경과 효도, 혈연 집단 내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 학연 집단에서는 선배에 대한 예우 등과 같은 형태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덕치 이념에 기반한 연고 집단 내의 인간 관계는 앞에서 말했듯이 서구적인 의미에서 평등한 개인들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선배와 후배, 연장

자와 연소자와 같은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서열화된 불평등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평등한 참여자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주는 선거 제도의 완비와 같이 단순한 법률적 절차에 의해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는 사회에 공유되어 있는 제도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역사적 배경과 연관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맥락을 도외시한 채 하나의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확립을 이상으로 삼는다면, 연고 집단의 강한 영향력과 같은 역사적 유산은 그것이 근대화이든 민주화이든 우리가 설정한 서구 사회의 모델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연고 집단의 영향력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혹은 긍정적이든 어느 한 순간의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으로 쉽사리 제거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적인 전통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사회의 개인에 대한 우위를 강조해 온 문화 속에 살아 왔다. 서구의 자유주의적 전통은 개인이 국가 권력 혹은 타인의 부당한 강압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여 왔다. 반면에 우리의 유교적 전통에서는 주어진 윤리 공동체의 객관적 도덕규범에 자기 내부의 도덕을 일치시키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왔다.¹⁵⁾

15) 이승환 “유가에 권리 개념이 있는가?” 『유가 사상의 사회 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3) Jean Cohen and Andrew Arato,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IT Press, 1992).

14) Joseph Chan, “An Alternative View,” *Journal of Democracy* 8:2 (1997), pp. 35~48.

서구가 부당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유를 추구하여 왔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심성을 다스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규범에 부합하려는 적극적 자유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 및 자기 절제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을 인정하는 긍정적 자유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보다 확대된 자유에 대한 개념과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자론적이며 추상적인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기초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개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우리는 공허한 보편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관계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고, 집단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공동체적인 유산이 강하게 살아있는 문화적인 전통을 고려한다면, 서구적인 의미의 시민권 신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차라리 민주주의적 발전 과정이 결코 단선적인 하나의 과정이 아니며 각 사회의 발전 과정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가, 혹은 집단이나 사회의 권리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다양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소극적으로 문화와 사회적 규범의 차이만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적 전통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소외되고 원자화된 이기적인 개인들의 결집력 없는 단순한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는 서구 사회는 총체적인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최후의 공동체인 가족의 와해, 청소년들의 약물 복용과 폭력적인 범죄의 만연, 사회로부터 방치되어 국가에 의해서 물질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외로운 노인들의 문제는 서구

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스스로 만들어 낸 자기당착의 결과이다. 더구나 동구권의 붕괴 이후 이데올로기적 공백 상태에서 극단적인 상업화와 물질주의 문명, 그리고 극도의 개인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되던 맑스주의의 집합주의적 해결책마저 그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도덕적 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동양의 전통적인 가치의 현재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IMF의 개입과 더불어 지금까지 동아시아 발전의 원동력으로 지적되어 온 유교적인 전통의 긍정적인 가치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교적 가치는 최근의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양산해 낸 사회적 비효율성의 총체적인 원인으로서 비판받고 있다.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유산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극복되거나 타파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거나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의 시민권을 신장시키는 방식의 사회 발전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개인을 공동체에 강하게 결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질서를 하나의 대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각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가능성을 인정하고 개인을 공동체에 결속시켜 주는 유교적 질서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를 민주주의 체제에 접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 권리와 책임, 자유와 질서 사이에 균형을 도출해 내는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서구식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면서 우리 나름의 민주주의적 발전

과정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개인들을 결속시켜 주는 공동체적 문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근대화를 완성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서구에서 유교적 문화 전통의 유용성을 배우고자 하는 시도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비영리·비정부 영역 그 중에서도 특히 연고 집단의 기능과 역할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